

“완주·전주 통합, 올림픽 개최 필수조건”

시군 통합추진 시민단체 연합,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자치도 적극 역할·중앙정부 전폭 지원 촉구
전북도정 상설회의·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추진하는 11개 시민단체 연합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통합추진 단체연합 소속 약 20여 명의 회원들이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최종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전북이 세계적인 올림픽 개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추진 단체연합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외국 경쟁도시보다 뛰어난 기반을 갖춰야 하며,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광역시급 면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의 국가 근본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구조로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경제·사회·문화적 혁신을 위한 절호

의 기회이며, 이를 계기로 전북의 낙후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배구·농구·탁구·핸드볼 등 4개 종목의 경기장을 신축하고, 나머지 33개 종목은 기존 시설과 임시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통합추진 단체연합은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전북도정 상설회의’를 구성해 올림픽 유치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할 것을 김관영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에는 정동영·김은덕·이성운 국회의원, 완주군 지역 안호영 국회의원,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정이 협력할 것을 제안하며, 전북대·우석대 총장, 언론사 대표, 종교계 인사, 경제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연합이 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시 적극적으로 40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만9,0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전북에는 각각 27조9,000억원, 37만4,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추진 단체연합은 “올림픽 개최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완주·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36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도의 전폭적인 협력과 전략적 유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일제가 강제로 갈라놓은 완주와 전주가 이번 기회에 통합되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수방사 1경비단, MBC에 도면 요구 구조정실 등 시찰”

민주 정동영 의원 “계엄 당시 1차적으로 방송 3사 장악 예비 경찰 실시 증거 드러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방송사들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수방사 1경비단은 도면을 요청하고 MBC에 직접 방문해 △구조정실 △부조정실 △본사 외곽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경비단은 MBC에 건축물 현황도를 요구하며 수방사 소속 군인 5명이 실제로 방문하고 주요 보안지역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는 “작전지역 진숙와 및 현황속지”라고 표기돼 있다. 수방사 1경비단은 본사 ‘구조’와 뉴스센터 ‘부조’를 시찰하고 본사 외곽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MBC 박건식 기획본부장에게 “구조란 ‘구조정실’을 뜻하며 방송 송출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구조정실이 차단되면 실제적인 방송 차단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MBC 박건식 기획본부장은 “2024년 2월 6일자의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서 MBC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것은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



회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도면 제출을 요구 받았던 KBS와 SBS에는 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방송공사와 방통위(SBS)는 2024년과 2025년 “(KBS와 SBS에)방문하지 않았다”, “장소를 시찰하거나 둘러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수방사가 MBC를 방문할 당시 공문의 양태도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시’에 ‘방호진단’ 명목으로 매년 상하반기 군에서 주요 시설점검을 하긴 하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정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BC의 경우에도 그간 받았던 공문에는 ‘마포구 청장’, ‘마포경찰서장’, ‘마포소방서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방사 1경비단 명의로 받은 공문에는 ‘수도방위사령관(작전과장)’, ‘수도방위사령관(통합방위과장)’ 등이 명시됐고 경찰·소방 등의 유관기관은 없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건식 기획본부장은 “이전에도 군이 보안 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일반 보병사단이었으며 군민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합동점검을 했는데, 2024년 2월 6일자 공문은 수방사만

단독적으로 저에게 보낸 것이어서 이해적이고 사상 처음”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 국방홍보원은 계엄한 달 전 MBC에 다시 자재사양과 단면도를 재차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군은 계엄 한 달 전 MBC에 자재사양 등과 함께 단면도를 요구했는가”라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MBC(방송문화진흥회)는 “계엄 한 달 전 요구했으며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1경비단이 계엄 전에 MBC에 방문해 구조와 부조를 시찰하고 간 것도 이해적”이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MBC에 수차례 단면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계엄의 사전 준비가 정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라며 “소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사에 여러 차례 도면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송 3사 중 유일하게 수방사가 방문해 ‘구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시찰하고 간 MBC, 도면이 군에 제공됐지만 요청만 해도 준 적도 없는 SBS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에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란이라고 쓰지 말라’라고 발표한 방통위위원이 진정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이처럼 침해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비판했다.

/김국희 기자

대상포진,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

민주 박희승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희승 의원은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



고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 건강권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챙겨나가야 한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尹 지시 상법 개정, 국힘은 이행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로테нда 홀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국민의힘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5월 9일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상법 개정을 적극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1소위에서부터 줄곧 반대해왔



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는 투자자들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5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해외 투자 신뢰도 상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항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모색

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토사 퇴적·준설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 도의원들이 5일 토사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하는 군산항 문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 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군산항의 고질적인 토사 퇴적 현상의 심각성을 각 관계기관이 함께 인식하고,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동구(군산2)·박정희(군산3) 의원과 김병하도 해양청만과장, 이우정 군산시 항만해양과장, 고병수 군산항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을 둘러봤다.

문승우 의장 등 일행은 군산항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를 둘러보며 토사 퇴적 현황과 준설 상황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질적 현안인 토사 퇴적 현상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유지준설예산이(매년 약 200억원 필요) 계획 대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항에는 연간 약 300만 m³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60~70만m³에 불과해 댐질식 준



설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수심이 얕아 안전 우려로 군산항 입항을 꺼리는 선박들이 다른 항만에 들러 화물을 하역한 후 무게를 조정해 군산항에 입항하는 등 업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승우 의장 등은 군산항 현장 점검에 이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류승규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국가무역항인 군산항을 정부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유지 준설비 예산을 확대하고, 제2 준설도 투기장 신속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 투기장 건설까지의 3년 공백기간 동안 준설토를 아적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해 군산항의 상시 준설 전담기관인 ‘준설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만호 기자

난임 극복 지원정책 강화

서난이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이달 중 시행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민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도내 기업체와 시군청의 난임 지원현황을 평가한 후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존 난임치료휴가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난임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난임과 유·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상담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난임치료에 있어서의 3요소인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난임치료를 통한 출생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만호 기자



최형열 도의원, 재해위험

삼천동 용산마을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재해위험지구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용산마을의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형열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전주시 자연재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재해위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의 노후화 및 장애 발생으로 재난방송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난안전시설 및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난예경보 지원 및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검토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조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뀐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내 민원 등 처리를 위해 솔선수범해 발벗고 나서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만호 기자